ASAN
REPORT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년 4월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san Report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3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제 임 스 김

제임스 김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2012년)와 랜드 연구소의 하계 연구원(2003~2004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 건 희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

목차

요약 06

I. 들어가며 09

II. 대북 인식 10
- 1. 북한 이미지 10
- 2. 안보 위협과 북핵 문제 14

III. 북핵 위협 인식 18
-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18
- 2. 북핵 위협 인식 20

IV. 북핵 위협 대응 25
- 1. 미국 확장억제 25
- 2. 북핵 위협 대응 29
- 3. 핵무장 여론: 핵개발, 전술핵 배치 31

V. 나가며 36

조사방법 39

부록 1: 아산정책연구원 북핵 위협 인식 조사 42

부록 2: 자체 핵개발 국내 여론조사 48

그림

[그림 1] 북한 이미지 12
[그림 2] 안보 위협 인식 15
[그림 3] 북핵 문제 인식 16
[그림 4] 시기별 북한의 무력도발 19
[그림 5] 국가 안보상황 평가: 부정 인식 21
[그림 6] 국가 안보상황 평가 및 전망: 부정 인식 22
[그림 7]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26

표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북한 이미지 13
[표 2] 북핵 문제 관심별 북핵 위협 영향력 17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국가 안보상황 평가 23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27
[표 5] 북핵 도발 억제 효과: 군사대비 체제 및 선제타격 방침 30
[표 6] 북핵 위협 대응 33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핵무장 의견: 핵개발, 전술핵 배치 35

요약

본원은 2022년 11월 대북 인식, 북한 위협,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여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점에 북핵 위협, 그 대응에 대한 국내 여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는 2022년(11월) 조사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여론 변화도 검토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다.

-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 이미지를 연상했다. ‘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2.5%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 ‘북한’을 부정 이미지와 연관 지은 답은 66.5%로 많았다. 긍정, 중립 이미지는 각각 18.5%, 9.7%로 부정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북한 이미지는 주변 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북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북한 이미지는 다소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별로는 부정 이미지가 60세 이상 77%, 30대 76%, 50대 71.4%, 20대 66.4% 순으로 많았다. 유일하게 40대만 50%대(56.3%)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보수 83.5%, 중도 68.4%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는 58.7%였다. 이는 대북 인식이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린 과거 조사와 부합했다.

-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전통안보(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요인을 1, 2순위 위협으로 꼽은 비율은 다수였다. 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등 세 요인을 1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72.3%, 2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61.3%에 달했다. 신흥안보, 즉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테러리즘 등은 30% 내외에 그쳤다.

- 안보 위협에 대해 물었을 때,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은 답이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가장 많았다. 다중응답 결과도 67.4%가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구도는 각각 34.8%, 33%였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상회했다.

- 2022년(11월), 한국인은 북핵 문제에 80.9%가 관심이 있다고 했다(관심 없다 18.8%). 북한 무력도발이 2022년 들어 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탓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북한 핵 위협이 본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2020년 44.2%에서 2022년 53.4%로 9.2%p 늘었지만, 2년 사이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2020년에 비해 북핵 문제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소폭이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보다 우위가 됐다.

- 미 CSI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점차 늘었다. 2012~2013년 3~4회에 그친 도발은 2014~2015년 연 8회로 늘었다. 또 2016~2017년, 북한의 도발은 각각 연 16, 17회나 됐다. 정세가 반전된 2018년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췄으나,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북한은 2019년에 도발(11회)을 재개했다. 2022년 북한의 도발은 최다로 38회에 이르렀다.

- 북한의 도발 추이에 따라 북핵 위협 인식은 시기별로 달랐다. 국가 안보상황 인식에 따르면, 도발이 없는 평상시 국가 안보상황이 나쁘다고 한 비율은 30~50% 초반이었다. 반면, 핵·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에는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60% 내외로 늘었다. 북한 도발이 잦아지고 고도화되면서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2022년 11월, 70.7%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 2010년 이래 한국인은 50% 내외가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신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북한 도발이 늘면서 2022년에는 52.9%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

은 2012년 47.9%로 최저치, 2017년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물었을 때, 사용할 것이란 답은 43.1%였다(사용하지 않을 것 54.2%). 앞선 문항 대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답이 9.8%p 감소했다. 이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상황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북 핵보복을 할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로 절반 수준이었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대비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했다.

- 미국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이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한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했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 범위 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다.

- 사드 추가 배치에는 58.7%가 찬성했고, 반대는 38.3%였다. 사드 배치는 정파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인지 찬성, 반대 의견 간 차이가 20.4%p로 비교적 적었다.

I. 들어가며

2023년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한국은 2022년 5월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도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해 '선제 핵공격'을 명문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 인센티브를 약속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전략, 대내 결속 차원에서 2022년 역대 가장 빈번한 도발을 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처럼 역내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대국 사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후 가장 고조된 상황에서 본원은 북한, 북핵 위협과 대응 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여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점에 북핵 위협, 그 대응에 대한 국내 여론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과거 조사자료와 타 연구기관의 비교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대북 여론 변화를 추적하고, 북한의 위협과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봤다. 특히 북핵 위협 대응으로는 핵무장 여론도 검토했다. 미국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짚어봤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사드') 추가 배치와 확장억제에 대한 견해도 살펴봤다.

Ⅱ. 대북 인식

한국인의 대북(對北) 인식은 양면적이다. 북한에는 한민족으로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긍정 시각이 있는 한편, 핵개발로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부정 시각도 있다. 이 복잡한 정서에는 무력도발,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등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원의 과거 조사에 따르면 남성, 고령층, 보수는 여성, 젊은 층, 진보에 비해 북한을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짙었다.[1]

한국인의 대북 정서는 2018년, 외교적 노력과 비핵화 협상 등으로 한때 개선된 바 있다. 예외였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될 때 대북 여론은 다소 나아지기도 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북한 호감도(favorability)는 부정 범위(0~4점, 5점=중립)에 머물렀다.[2] 그럼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변했을까? 북핵 위협, 북한 이미지, 안보 불안 등을 통해 한국인의 대북 인식 변화를 검토했다.

1. 북한 이미지

북한 위협 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에게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조사했다. 실사 단계에서는 일정 단서에 의해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즉 다른 문항이 북한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항을 조사의 맨 앞에 배치했다. 또 응답지 순서가 응답자 답변에 미치는 영향, 즉 순서효과(order effect)를 고려해 응답지는 순환(rotation)하도록 했다.

응답지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을 포괄하기 위해 '계획경제', '사회주의 정치', '김정은

---

1.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1).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22).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2. 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국가 호감도(Country Favorability) 추이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호감도는 0~10점, 11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로 최근 5년간 북한 호감도는 2018년 6월 4.7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최저점은 2.17점(2017년 3월)이었다.

등 독재자', '핵무기(핵실험 등)', '한반도 통일', '남북 경제협력(개성공단 등)' 등을 포함했다. 또 응답지가 편향되지 않도록 '긍정'(①한반도 통일, ②남북 경제협력), '중립'(③계획경제, ④사회주의 정치체제), '부정'(⑤김정은 등 독재자, ⑥핵무기)으로 균등하게 구성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라는 단어에서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 이미지를 연상했다. 북한이 독재로 이어진 역사가 길고, 그동안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북한 도발이 잦아지면서 김정은 일가, 핵무기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어 보인다. 이런 북한 관련 동향은 다른 문제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였기에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3]

다음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이 12.5%로 나타났다. 북한 도발이 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안보 환경에서도 이들이 '북한'과 통일을 연관 지은 점은 응답자 고유 특성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020년 본원 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국가가 아닌 동포 혹은 민족'이라고 한 답은 12.7%로 앞서 북한과 통일을 연관 지은 비율과 비슷했다. 이를 종합하면,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2022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통일을 떠올린 응답자는 과거(2020년) 북한을 동포나 민족으로 연관 지은 이들과 같은 응답층일 가능성이 있다.[4]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한 답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전반적으로 부정(⑤+⑥) 이미지와 북한을 연관 지은 답이 66.5%로 가장 많았다. 긍정(①+②), 중립(③+④) 이미지는 각각 18.5%, 9.7%로 부정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앞서 언급했듯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최초 떠올린 북한 이미지가 달랐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부정 이미지가 지배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북한 이미지는 다소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

3. 출처: 2022 KBS 국민 통일의식 조사(2022년 7월 27일~8월 1일). 북한을 부정적으로 본 시각은 2022년 KBS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을 경계, 적대 대상으로 본 응답은 각각 40.3%, 32.7%로 다수를 차지했다.
4.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0년 10월). 이 조사에서 북한 이미지를 측정한 문항은 "선생님께서는 '북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였다. 응답지는 '독재국가' 43.9%, '적대국가' 21.8%, '국가가 아닌 동포 혹은 민족' 12.7%, '동반가능국가' 8.1%, '야만적 국가' 7.3%, '열등한 국가' 6.1%였다.

[그림 1] 북한 이미지[5] (%)

북한에서 연상한 이미지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재분류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했다. 과거 조사에서 밝혀진 차별적 대북 인식이 북한 이미지 인식에서도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분석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북한 이미지는 연령대, 이념성향,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인식에 따라 달랐다.[6]

전체에서 부정 이미지가 우세했으므로 연령대, 이념성향, 무력충돌 가능성 인식에 따른 분석에서도 부정 이미지가 많았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부정 이미지가 60세 이상 77%, 30대 76%, 50대 71.4%, 20대 66.4% 순으로 많았다. 유일하게 40대만 북한을 부정 이미지와 연관 지은 비율이 50%대(56.3%)였다. 또 40대는 북한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린 비율이 30.5%로 다른 연령대를 크게 앞섰다.

---

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6.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가능성이 높다'를 10으로 했을 때,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에 이용했다. 편의를 위해 11점 척도 응답의 평균 값(mean=3.85)을 기준으로 충돌 가능성을 낮게(42.1%), 높게 본 집단(57.9%)으로 구분했다. 모름·무응답(2.1%)으로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북한 이미지 인식 차이는 이념성향에서도 드러났다.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보수 83.5%, 중도 6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는 58.7%가 부정 이미지를 떠올렸다. 긍정 이미지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진보가 북한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린 비율(26.8%)은 보수(10.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북 인식이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린 과거 조사와 부합하는 결과다.

무력충돌 가능성 인식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높게 평가한 응답층은 각각 63.2%, 75.1%가 북한에 대한 부정 이미지와 관련된 응답지를 택했다.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게 본 응답층은 북한을 위협적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력충돌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층 중 24.7%가 북한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북한 이미지 (%)

		긍정	중립	부정
전체		18.5	9.7	66.5
성별	남성	21.4	11.3	67.3
	여성	17.9	9.2	72.9
검정값		*n.s.*		
연령대	20대	12.5	21.1	**66.4**
	30대	12.3	11.6	**76.0**
	40대	**30.5**	13.2	**56.3**
	50대	21.6	7.0	**71.4**
	60세 이상	19.2	3.8	**77.0**
검정값		x^2=59.642, *df*=8, *p*<.05		
이념 성향	보수	10.4	6.1	**83.5**
	중도	20.7	10.9	**68.4**
	진보	**26.8**	14.4	**58.7**
검정값		x^2=45.558, *df*=4, *p*<.05		
충돌 가능성	낮음	**24.7**	12.1	**63.2**
	높음	16.0	8.9	**75.1**
검정값		x^2=15.904, *df*=2, *p*<.05		

2. 안보 위협과 북핵 문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시간이 지나며 더 악화된 나쁜 문제"라고 했다.[7]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해 온 것이 핵심 이유다. 근래 북한 핵 위협은 더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의 안보 위협 인식도 물었다. 응답자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신냉전구도', '테러리즘 확산',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을 골랐다.

[그림 2]는 1, 2순위 응답과 둘을 합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전통안보(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요인을 1, 2순위 위협으로 꼽은 비율이 다수였다. 전통안보 위협이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본 비율은 각각 1순위 72.3%, 2순위 61.3%였다. 신흥안보, 즉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테러리즘 등은 30% 내외에 그쳤다. 이는 한국인 대부분이 신흥안보에 비해 전통안보 요인을 더 큰 위협으로 봤다는 뜻이다.

둘째, 북한과 중국 요인을 위협으로 본 답이 많았다. 북한의 위협(43%), 중국의 부상(12.4%), 미중 패권경쟁으로 가속화된 신냉전구도(16.9%)는 북한, 중국과 연관된 위협이다. 북한, 중국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요인이 위협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조사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이뤄졌고, 그로 인해 촉발된 공급망 불안도 지속됐으며, 이상기후 현상도 늘었지만 이를 위협으로 꼽은 답은 적었다.

셋째,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위협으로 꼽은 답이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가장 많았다. 1, 2 순위를 합한 다중응답의 결과도 67.4%나 됐다([그림 2], 상단 값).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구도는 각각 34.8%, 33%(다중응답)였는데, 이를 합해야 북한의 위협과 비슷했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상회했다.

---

7. Reuters (2021). "Blinken says U.S. plans full review of approach to North Korea." *Reuters*, January 20, 2021.

북한,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핵심 변수다. 한국인 다수가 북한 위협, 중국 부상을 큰 안보 위협으로 본 점은 주목할 점이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군사 차원이란 점에서 전통안보 요인을 주요 위협으로 본 위의 결과는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북한, 중국 요인의 속성이 한국인의 안보 위협 인식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 안보 위협 인식[8] (%)

다음은 북한(북핵) 관심과 북핵 위협이 한국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그림 3] 참고). 과거(2020년 10월)에 비해 북핵 문제(북한) 관심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조사 대상이 북한, 북핵 문제로 달랐지만 북핵 문제가 북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 경향성을 찾을 목적으로 결과를 비교했다. 북핵 위협 영향력은 북핵 위협이 본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복해 물은 결과다.

2022년, 한국인은 북핵 문제에 80.9%가 관심이 있다고 했다. 관심 없다고 한 답은 18.8%였다. 북한 무력도발이 2022년 들어 크게 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위협 수위를 크게 높인 탓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언

8.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그림 2] 그래프 상단 값은 1, 2순위 응답을 이용한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결과다. 1, 2순위 응답의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1, 2순위 응답을 합해 분석했다(n=1,797; 1순위 n=933, 2순위 n=846).

론 보도가 나오면서 북핵 위협이 응답자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진 것도 이유에서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조사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물었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관심도가 6대 4로 엇갈린 당시를 놓고 보면, 2022년(11월) 결과는 한국인의 북핵 문제 관심이 꽤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북핵 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80.9%) 중 '매우 관심 있다'가 30%, '어느 정도 관심 있다'가 50.9%로 비교적 약한 관심을 보인 이들이 다수였다. 북한 핵 위협이 아무리 높아도 한국인이 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안보 불감증'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 경향은 북핵 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에서 일부 드러났다. 북한 핵 위협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은 2020년 44.2%에서 2022년 53.4%로 9.2%p 늘었다. 2년 사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증가폭이 다소 미미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본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55.8%)이 영향을 미친다(44.2%)보다 많았던 2020년 결과가 2022년, 뒤바뀐 점은 유의할 점이다. 거의 반반으로 나뉜 응답 분포가 소폭이지만 영향을 미친다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그림 3] 북핵 문제 인식[9] (%)

9.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0년 10월, 2022년 11월).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 북핵 위협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이 50% 대에 머문 점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비교(*t-test*)를 했다([표 2] 참고). 그 결과, 응답자는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북핵 위협이 본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에 관심이 높은 층은 2.68점으로 전체 평균(2.59점), 북핵 문제에 관심이 낮은 층(2.19점)보다 북핵 위협 영향력을 크게 봤다.

[표 2] 북핵 문제 관심별 북핵 위협 영향력 (1~4점)

		북핵 위협 영향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북핵 문제 관심	**전체**	995	2.59 (.944)
	낮음	188	2.19 (.949)
	높음	804	**2.68** (.921)
검정값		t=.265, df=990, p<.05	

*북핵 위협 영향력: 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Ⅲ. 북핵 위협 인식

한국인은 북한을 1순위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한국인의 북한 위협 인식은 북핵 이슈에 의해 좌우됐다. 북한 핵기술이 고도화되고, 도발이 늘면서 북핵을 실질적 위협으로 본 한국인이 증가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북핵 위협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안보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인은 북한 핵을 큰 위협으로 여겼다. 다음은 2010년 이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인의 안보 인식을 검토했다.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북한 안보 위협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김정은 집권기 북한은 핵개발에 적극 나섰고, 기술 고도화로 북핵 위협은 현실화했다. 북한의 증강된 핵 능력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다. 2018년, 비핵화 대화가 성사됐으나 협상이 결렬되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탓도 있다. 북한 안보 위협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는 2010년 이래 북한의 무력도발을 집계한 결과를 검토했다.

미 C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무력도발은 시기별로 횟수(도발 일수)가 달랐다([그림 4] 참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도발은 점차 늘었다. 2012~2013년 3~4회에 그친 도발은 2014~2015년 연 8회로 늘었다. 또 2016~2017년에는 북한 핵 도발이 급격히 늘었는데 차례로 연 16, 17회나 됐다. 이 시기 북한은 2016년 6차 핵실험, 2017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했다.

2018년은 한반도 정세에 반전이 일어난 시기로 평창 올림픽,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비핵화 협상이 일정한 성과를 낼 거란 관측도 나왔다. 일부 언론을 통해 장밋빛 전망이 보도되며 한반도 정세는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이 2019년 도발(11회)을 재개하며 비핵화 기대감은 줄었다.

2022년 북한의 도발 일수는 최다인 38회에 이르렀다. [그림 4]에 제시한 북한 도발 횟수를 연간 비율(%, {n/365}×100)로 계산하면 북한은 2022년, 열흘에 하루 꼴로 도발을 한 셈이다(10.4%). 2010년 이래 최고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던

2016~2017년에도 각각 16일, 17일로 차례로 4.4%, 4.7%에 그쳤다. 지난 10년 간 북한 도발의 연간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최초로 그 수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년, 한국인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노출된 빈도는 크게 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사일 수(핵실험 포함)를 기준으로 한 집계에서도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그림 4](붉은 점선 참고)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010~2011년 0개, 2012~2013년 각각 4개, 9개에 그쳤다. 2014년 처음 두 자릿수가 된 미사일 수는 2014~2017년까지 17개, 18개, 23개, 25개로 점점 늘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 직전까지 북한은 20개 내외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정세가 반전된 2018년에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 발사한 미사일 수는 7년 만에 0개가 됐다. 그러나 2019년부터 북한은 도발을 재개해 2019~2021년에 각각 20개, 9개, 10개의 미사일을 쐈고, 2022년에는 94개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림 4] 시기별 북한의 무력도발[10] (좌: 일, 우: 개)

10. 출처: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2022년 12월 19일 방문. [그림 4]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핵실험, ICBM, SLBM, IRBM, MRBM 등 유형별로 나눠 집계한 결과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그림 4]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2010년 이후 집계치만 제시했다. 여기서 도발 횟수는 도발 일(day)을 기준으로 했으며, 하루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는 1회로 간주했다.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무력도발 수위를 시기별로 가늠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사일 유형 등 구체적 정보가 아닌 일 단위 도발 횟수 및 미사일 수를 기준으로 했다.

2. 북핵 위협 인식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은 시기별로 달랐다. 이는 국가 안보상황 인식에서 드러났다. 본원은 2012년 7월~2016년 6월 조사 결과([그림 5] 참고)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11] 해당 기간 도발이 없는 평상시 국가 안보상황이 나쁘다고 한 응답은 30~50% 초반이었다. 반면, 핵·미사일 등 북한의 무력도발 후에는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60% 내외로 늘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13년 2월, 2016년 1월 이후에는 부정 인식 상승폭이 컸다. 또 북한이 대미 무력시위를 본격화한 2016년, 한국인의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50~60%대로 나타났다.

당시만해도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70%를 넘지 않았다. 핵실험 등 도발 직후에만 부정 인식이 60% 내외의 전고점을 회복했다. 익히 알려진 '안보 불감증'이 드러난 결과로 북한의 군사도발이 일어난 때에만 일시적으로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이 늘었다 줄어드는 변화를 반복했다. [그림 5]는 2022년 조사 결과를 추가한 추세다. 2022년 11월,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70.7%로 최초로 70%를 넘었다.[12] 국가 안보상황 인식을 같은 문항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 함의가 있다.

본원은 2016년 6월~2022년 11월 사이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없어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 5] 국가 안보상황 평가에 따르면 인식이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 인식이 전고점인 2013년 2월, 63.3%를 넘어섰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또 3~4차 핵실험 후 기록했던 부정 인식 비율인 63.3%, 53.7%를 상회했다는 점은 국가 안

---

11.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그림 5]는 본원의 이슈브리프 "북핵 대응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 (2017)"의 [그림 1]에 2022년 11월 조사자료를 추가한 결과다. [그림 5]에 표시한 수치는 국가 안보상황 평가 문항("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에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답한 비율(%)이다. 중립 응답인 '보통이다'는 전화인터뷰(CATI)에서 응답지를 불러주지 않았다. 실사에서 응답자가 중립을 뜻하는 답을 했을 때만 '보통이다'로 코딩했다.
12.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75호(2017년 9월 1주-6차 핵실험과 대북관계). 핵실험 직후 안보상황 평가는 측정 문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조사 시점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지만 한국갤럽은 3~6차 핵실험 후(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안보 인식을 조사했다. "최근 북한이 O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귀하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문항을 이용했다. 북한 핵실험을 위협적으로 본 비율은 순서대로 76%, 61%, 75%, 76%로 나타났다. 문항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 핵실험 후 다수가 한반도 안보를 부정적으로 봤다는 점은 동일했다.

보상황 인식이 부정적이란 점을 보여준다. 2022년 북한 도발이 고도화됐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림 5] 국가 안보상황 평가: 부정 인식 (%)

추가로 2018~2022년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보면, 앞서 본원 조사결과([그림 5])에서 드러난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6] 참고). 2022년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전망은 모두 전고점을 경신했다. 다만,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상황이 '나쁘다',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한 답은 2022년 10월 각각 57%, 4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측정 방식(5점 척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부정 인식이 2022년 하반기,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같다. [그림 6] 자료는 2018년 북미, 남북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리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시점부터 2022년 말까지 국가 안보상황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초까지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비율이 평가(최저 16%, 최고 29%), 전망(최저 14%, 최고 26%) 모두에서 낮았다는 점이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고도화되면서 한국인의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2022년 하반기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림 6] 자료에서 2018년 이래 50%를 넘지 못한 부정 인식이 50% 후반이 된 점은 본원 자료([그림 5] 참고)에서 부정 인식이 2022년

11월, 최초로 70%를 넘긴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북한 도발로 악화된 국가 안보상황 인식은 몇 달 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변화를 보였다. 즉, 급격히 악화된 국가 안보상황 인식은 일시적 현상이었다. 2018년과 같은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의 응답자는 국가안보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봤다.[13]

[그림 6] 국가 안보상황 평가 및 전망: 부정 인식[14] (%)

2022년 11월, 본원의 국가 안보상황 평가는 연령대별로 엇갈렸다. 40대 이상에서 부정 인식이 높았다(40대 80.7%, 50대 및 60세 이상 79.3%). 젊은 층에서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낮았는데, 20대는 64.5%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이념성향별 차이에 따른 인식

13. 본원과 한국리서치 자료 각각 50%, 40% 내외가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4.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경제, 안보 평가 및 전망). 한국리서치는 2018년 1월부터 매월(4주) 국가 안보상황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해 왔다. [그림 6]은 저자가 해당 조사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는 '나쁘다', 전망은 '나빠질 것이다'를 응답치(%)로 표시한 것이다(한 달에 두 차례 조사가 있는 경우는 평균 값을 산출했다). 중립 응답이 있다는 점은 본원 조사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리서치의 국가 안보상황 평가 및 전망은 각각 "최근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에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대체로 나쁘다', '나쁘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약간 나아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로 답한 것을 3점으로 재코딩한 결과다. 본원 조사와는 평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전망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를 응답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리서치는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 비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https://hrcopinion.co.kr/archives/25047).

편차는 대체로 부정 인식이 높았던 탓에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70% 이상이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와 달리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2월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당시엔 30대 73.3%, 60세 이상 65.7% 순으로 부정 시각이 높았다. 다음으로 40~50대가 60% 초반으로 비슷했다(50대 60.8%, 40대 60.6%).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3.5%, 보수 62% 순으로 부정 인식이 높았다. 안보 인식이 고령, 보수층에서 뚜렷했던 과거와 상반된 결과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국가 안보상황 평가[15] (%)

		2016년 2월		2022년 11월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2.1	**53.7**	22.0	**70.7**
연령대	20대	47.6	52.4	35.5	64.5
	30대	26.7	**73.3**	26.7	73.3
	40대	39.4	60.6	19.3	**80.7**
	50대	39.2	60.8	20.7	**79.3**
	60세 이상	34.3	**65.7**	20.7	**79.3**
검정값		x^2=16.524, *df*=4, *p*〈.05		x^2=16.591, *df*=4, *p*〈.05	
이념성향	보수	38.0	**62.0**	23.0	77.0
	중도	41.5	58.5	20.8	79.2
	진보	26.5	**73.5**	28.5	71.5
검정값		x^2=10.963, *df*=2, *p*〈.05		*n.s.*	

이는 북한이 3년 만에 핵실험을 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 후, 30대와 진보가 국가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이유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으로 일부 표출된

1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6년 2월, 2022년 11월). [표 3]에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했다.

것으로 보인다.[16] 2016~2022년 사이 변화는 연령대로는 40~50대, 이념성향은 중도, 보수에서 변화폭이 컸다. 이는 40~50대, 중도 및 보수의 2016년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낮아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16.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75호(2017년 9월 1주-6차 핵실험과 대북관계). 앞서 살펴본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6차 핵실험(2017년 9월) 이후 북핵 위협 평가는 국정운영에 따라 달랐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은 85%가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 평가층은 72%만 이에 공감했다. 이념성향별 위협 인식은 보수 84%, 중도 79%, 진보 71% 순으로 과거 조사결과와 부합했다.

Ⅳ. 북핵 위협 대응

한국인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중시했다. 동맹을 축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다. 본원이 2022년 6월 발간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도발로 안보 위협이 높아졌을 때 한국인은 미국의 안보 보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쟁 가정 시, 미국이 한국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17]

1. 미국 확장억제

미국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중추다.[18] 동맹은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확장억제 인식은 안보 인식에 있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또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며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차례로 물었다. 본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산연례조사'에서 전자의 문항을 조사했으므로 2010년 이래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응답을 분석했다.

지난 10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한국인은 80~90% 내외였다. 대다수 한국인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봤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북한 핵공격을 가정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지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0년 이래 한국인은 50% 내외가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신뢰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북한 도발이 늘면서 2022년에는 52.9%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핵 전쟁 개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

17.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2).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본문에 인용한 결과는 아산리포트의 '한미동맹'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18. Wade L. Huntley. (2014).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Strategy 21*. 17(2): 236-61.

2010년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은 2012년 47.9%로 최저치, 2017년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응답 격차(핵무기를 사용할 것-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림 7] 붉은 점선 참고)는 2016~2018년에 비교적 컸다.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비율이 최소 10.8%p(2018년), 최대 22.4%p(2017년) 더 높았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늘면서 격차는 더 커졌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은 50% 내외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조사 결과도 2019년 51.4%, 2020년 51.1%, 2022년 52.9%로 50% 초반이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본 비율이 90% 내외를 기록한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할 만하다.[19] 한국인의 미국 확장억제 인식이 핵무기 사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7]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20] (%)

19.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2).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구체적 조사결과는 본문의 [표 3]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0~2020년).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2022년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은 3.8%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도 물었다([표 4] 참고). 앞선 문항에 이미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응답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했다.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답은 43.1%였다(사용하지 않을 것 54.2%).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21] (%)

		전제 없음		자국의 위험 감수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을 것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을 것
전체		52.9	43.3	43.1	54.2
연령대	20대	55.8	44.2	45.6	54.4
	30대	50.3	49.7	38.8	61.2
	40대	43.6	56.4	32.8	67.2
	50대	51.3	48.7	41.6	58.4
	60세 이상	66.3	33.7	55.5	44.5
검정값		x^2=26.874, df=4, p<.05		x^2=27.267, df=4, p<.05	
이념 성향	보수	63.3	36.7	50.5	49.5
	중도	51.0	49.0	42.3	57.7
	진보	47.8	52.2	40.2	59.8
검정값		x^2=16.514, df=2, p<.05		x^2=7.479, df=2, p<.05	
충돌 가능성	낮음	47.7	52.3	38.9	61.1
	높음	60.4	39.6	48.3	51.7
검정값		x^2=15.392, df=1, p<.05		x^2=8.538, df=1, p<.05	
북한 이미지	긍정	39.7	60.3	27.6	72.4
	중립	43.0	57.0	36.5	63.5
	부정	61.6	38.4	50.9	49.1
검정값		x^2=33.890, df=2, p<.05		x^2=34.135, df=2, p<.05	

21.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표 4]에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했다.

논리상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조건이므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답은 앞선 문항 대비 9.8%p 감소했다. 위 결과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북 핵보복을 할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망은 연령대, 이념성향, 무력충돌 가능성, 북한 이미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조건부 질문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응답은 60세 이상(66.3%), 20대(55.8%)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은 보수 63.3%, 중도 51%, 진보 47.8%로 차이가 났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거나 북한에서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각각 60.4%, 61.6%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응답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는 60세 이상(55.5%), 20대(45.6%)의 순으로 높았고, 이념성향은 보수 50.5%, 중도 42.3%, 진보 40.2%로 차이가 났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고 북한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는 각각 48.3%, 50.9%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공감했다. 위험 감수 조건에 따른 의견 변화는 대체로 비슷했는데, 보수층 변화가 12.8%p(63.3%→50.5%)로 가장 컸다.

연령대, 이념성향, 무력충돌 가능성, 북한 이미지로 나눈 응답층에서 모두 10%p 내외 변화를 기록했다. 즉,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조건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확장억제 신뢰 측면에서 전제 조건이 없을 때 약 5 대 4 의견 분포가 자국의 위험 감수를 조건으로 했을 때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약 4 대 5 분포로 바뀐 점은 유의할 점이다. 변화폭은 크지 않았지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던 전망에서 위험 감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더 앞서게 됐다. 위 결과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상황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현재는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는 편이지만, 미국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변수를 가정했을 때 확장억제 신뢰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미국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불개입 등 고립주의 경향을 보일수록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있다. 또 미국 내 여론이 우크라이나전 군사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도 한국인이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기댈 수 없는 근거가 된다.[22]

2. 북핵 위협 대응

6.25 전쟁 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개발은 지역 안보에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UN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따른 경제난, 안보 불안으로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그간 미국 확장억제로 북핵 위협에 맞서 온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조기 구축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북핵 도발 억제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2023년 정부는 미국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고, 재개된 연합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3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실사격훈련 복귀 등 한미연합군의 합동 대비태세 강화를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3]

이번 조사는 미국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의견 외 군사대비 체제, 정부의 안보 태세 방침이 북한 핵 도발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4점 척도로 물었다([표 5] 참고). 조사는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확실한 경우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이뤄졌다. 그럼에도 응답자는 정부의 북핵 도발 억제책에 유보적 평가를 했다. 군사대비 체제, 선제타격 방침 각각 평균 2.45점, 2.37점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중간 값=2.5점).

안보를 중시하는 윤 정부가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펼친 것을 고려하면 북핵 위협 대응 평가는 부정적이다. 물론 북핵 위협 억제책에 대한 평가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 무력도발이 과거보다 잦아졌고 고도화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정부의 기

---

22. 출처: AP-NORC Center (2022). "Widespread Support for a U.S. Role in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AP-NORC Center for Public Affairs Research*. May 24, 2022.
23. 출처: Jim Garamone (2023). "Austin Looks to Build on Strengths of Alliances with South Korea, the Philippines." *DOD News*. January 29, 2023.

존 안보 태세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표 5] 북핵 도발 억제 효과: 군사대비 체제 및 선제타격 방침 (1~4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군사대비 체제	962	2.45 (0.913)
선제타격 방침	972	2.37 (1.128)

*도발 억제 효과: 1=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4=매우 효과적이다.

북핵 위협 대응 평가가 미흡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도발 대응법에 대한 여론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핵 위협 대응에는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한 가지 이유로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할 순 없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의 바람직한 대응으로 실질적 군사타격(37.5%), 외교적 수단(30.9%), 군사적 방어(30.1%) 순으로 선호했다. 북한 도발에 강경책이 아닌 다른 대응을 선호한 답도 상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 무력도발에 군사타격을 선호한 의견은 다른 방안보다 약 6~7%p 높았지만 압도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면도 있어 한국인이 정부의 군사대비 체제 및 선제타격 방침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2022년(7~8월) KBS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찬성, 반대하는 비율은 각각 44.2%, 55.8%였다. 반대가 10%p 이상 높았다. 전임 정부 시기 대북정책 평가에 비하면 반대가 소폭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는 찬성, 반대가 2020년 48.5%, 51.5%였고, 2021년 46.9%, 53.1%였다. 2022년에는 찬성이 3~4%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24] 정부는 안보태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교 수단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4. 출처: KBS. 2022 국민 통일의식 조사(2022년 7월 27일~8월 1일).

3. 핵무장 여론: 핵개발, 전술핵 배치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를 상당수준 실현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 최근 더 심화했다. 북핵 위협 대응에는 미국 핵우산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 미국이 자국에 대한 보복 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방어할지 의문이라는 전망이 맞선다.

우리나라는 미국 확장억제에 의존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나아가 주한미군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 확장억제 신뢰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또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재래 전력 우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비용을 제외해도 핵무장에는 난관이 있다. 한국의 핵 보유를 비확산 체제 위협으로 보는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반대해서다.

핵무장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과 별개로 핵무장은 자체로 민감한 사안이다.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 정파나 정치인은 소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토(NATO)식 핵공유(Nuclear Sharing),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자체 핵개발 등이 북핵 대응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25]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현실적 제약과 관계없이 핵무장을 선호했다. 2010년 이래 본원 조사에 따르면, 자체 핵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배치를 지지한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26] 기술적 대처능력을 떠나 핵무장을 북핵 위협에 맞서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결과

---

25. 출처: 박수찬 (2023). "尹 "우리도 단기간에 핵무기 만들 수 있지만… NPT 존중해야"", 조선일보, 2023년 1월 31일자.
26.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2).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구체적 조사결과는 부록 2의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로 해석된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미중 패권경쟁,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27]

핵무장이 복잡한 사안이란 점을 차치하더라도, 근래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늘어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북핵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높아진 반면에 핵무장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다. 이번 조사는 핵무장, 즉 자체 핵개발, 전술핵무기 배치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응답자 의견을 물었다.

자체 핵개발은 국제사회 제제 가능성 언급 여부를 달리해 두 번 연속 물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묻고, 다음 문항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을 다시 답하게 했다. 조건부 문항은 첫 문항에서 이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고려한 답이 섞일 수 있지만, 다음 문항은 제재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 뒤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체 핵개발에는 64.3%가 찬성했다([표 6] 참고). 반대는 33.3%로 절반 수준이었다. 제재 가능성 언급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찬성을 낮추고, 반대를 높이는 효과를 냈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대비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 점은 유의할 점이다.

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논의된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한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했다. 또 2022년 3월, 전술핵 배치 조사 결과(찬성 59%)에도 근접했다.[28]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범위 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할 점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인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

27. 출처: 오병상 (2023). “핵무장 선동하는 전쟁공포와 파시즘”, 중앙일보, 2023년 1월 30일자.
28.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13년 67%, 2017년 61.8%, 2019년 46%, 2020년 61.3%, 2022년 3월 5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북한 도발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58.7%가 찬성했고, 반대는 38.3%였다. 과거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추가 배치는 군사적 실효성, 국익추구 관점에서 시각차가 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고, 중국을 자극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파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인지 찬성, 반대 의견 간 차이는 20.4%p로 비교적 적었다.

[표 6]에 제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자체 핵개발은 제재 가능성 언급 여부에 따라 찬성 의견이 각각 64.3%, 54.7%로 차이가 났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비율은 9.6%p 줄었다. 둘째,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비율(54.7%)은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61.1%)보다 낮았다. 여기서 제재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핵무장 방안 중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유의할 점이다. 셋째, 핵무장과 별개로 조사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지지는 58.7%였다. 이는 사드가 한반도 방어 차원으로만 논의된 탓으로 보인다.

[표 6]에서 찬성에서 반대 값을 뺀 수치(a-b)인 순 찬성 비율은 상대적 지지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핵 위협 대응 중 지지 강도는 자체 핵개발이 31%p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24.9%p, 사드 추가 배치 20.4%p 순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제사회 제제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순 찬성 비율이 12.4%p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 제제 가능성 등 핵무장 비용이 더 알려질 경우, 핵무장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 북핵 위협 대응 (%)

		찬성(a)	반대(b)	차이(a-b)
자체 핵개발	제재 가능성 언급하지 않은 경우	64.3[a]	33.3	31.0p
	제재 가능성 언급한 경우	54.7[ab]	42.3	12.4p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61.1[b]	36.2	24.9p
사드 추가 배치		58.7	38.3	20.4p

*같은 첨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표면적으로 핵무장을 선호했다. 다음은 자체 핵개발, 미국 전술핵 무기 배치 여론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어느 응답층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했다. 연령대를 제외하면 핵개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의견 분포는 하위 집단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북핵 위협 인식이 보수층에서 높았던 결과와 부합했다.

연령대별로는 자체 핵개발은 60세 이상(80.3%), 50대(67.9%)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면, 전술핵 배치는 60세 이상(79.7%), 20대(67.1%). 30대(63.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자체 핵개발은 20대 53.1%, 40대 55.9%로 찬성 비율이 낮았고, 전술핵 배치는 40대가 3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대, 40대가 각각 자체 핵개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찬성이 적었던 것은 차례로 현실적으로 핵개발 비용을 고려해서, 친미 성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원의 과거 조사에서 20대는 안보에도 경제 잣대를 대는 편이었고,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지도자) 호감도가 높지 않았다.[29]

이념성향별 차이는 자체 핵개발, 전술핵 배치 모두 중도, 진보보다 보수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보수는 자체 핵개발은 72.6%, 전술핵 배치는 75.2%가 찬성했다. 이에 반해 진보 중 자체 핵개발, 전술핵 배치에 찬성한 비율은 각각 54.6%, 49.3%로 20%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핵무장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정파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는 복잡한 사안인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정할 때 지지 정당, 정치인 등 정보 출처를 단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무력충돌 가능성, 북한 이미지에 따른 분석에선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향이 드러났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또 북한에서 부정 이미지를 떠올릴수록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에 찬성했다.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나 북한에서

---

29.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2).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본문 해석에는 다음을 참고(2022년 3월 조사)하기 바란다. 20대의 현실적 판단은 자체 핵무장 의견이 제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20대, 제재 가능성 언급 무 59.3%, 유 50.9%).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지 철회폭이 컸다. 40대가 비교적 친미 성향이 강하지 않은 점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2022년(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가 20대 각각 6.35점, 5.05점으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차례로 6.63점, 5.44점으로 다음으로 낮았다(평균, 미국 6.85점, 바이든 5.89점).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자체 핵개발에 각각 71.3%, 71.5%가 찬성했고, 전술핵 배치에는 차례로 69.7%, 72%가 찬성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핵무장 의견: 핵개발, 전술핵 배치[30] (%)

		자체 핵개발		전술핵 배치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64.3	33.3	61.1	36.2
연령대	20대	53.1	46.9	**67.1**	32.9
	30대	59.9	40.1	**63.8**	36.2
	40대	55.9	44.1	36.1	63.9
	50대	**67.9**	32.1	57.9	42.1
	60세 이상	**80.3**	19.7	**79.7**	20.3
검정값		x^2=50.157, df=4, p<.05		x^2=94.102, df=4, p<.05	
이념 성향	보수	**72.6**	27.4	**75.2**	24.8
	중도	68.8	31.2	62.2	37.8
	진보	54.6	45.4	49.3	50.7
검정값		x^2=24.259, df=2, p<.05		x^2=44.234, df=2, p<.05	
충돌 가능성	낮음	58.3	41.7	53.4	46.6
	높음	**71.3**	28.7	**69.7**	30.3
검정값		x^2=17.768, df=1, p<.05		x^2=27.011, df=1, p<.05	
북한 이미지	긍정	48.0	52.0	34.8	65.2
	중립	57.3	42.7	58.6	41.5
	부정	**71.5**	28.5	**72.0**	28.0
검정값		x^2=37.244, df=2, p<.05		x^2=85.131, df=2, p<.05	

3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2년 11월). [표 7]에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했다.

V. 나가며

본원은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2022년 11월,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대북 강경책을 채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복잡하게 얽힌 대북 정서는 군사도발,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 이슈에 의해 한 측면이 부각됐다.

대체로 한미동맹, 확장억제에 대한 견해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북 인식은 소폭 변했고, 부정 범위에 도달했다. 또 이번 결과는 북핵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상황에 따라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조사 결과다.

첫째,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국인은 '북한'에서 독재정치, 핵무기를 떠올렸다. 그럼에도 소수는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고 긴장이 고조된 때에도 북한을 한반도 통일과 연관 지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와 별개로 북한에서 통일을 떠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독재, 핵무기를 떠올린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 북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근래 북한이 도발을 자주 감행했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 탓으로 보인다. 북한 이미지가 부정으로 치우쳤지만 응답자 시각은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비록 절대치는 적었지만, 보수에 비해 진보는 북한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렸다. 이는 보수, 진보에 따라 대북 인식이 나뉜 과거 조사 결과와 일치했다. 안보 위협인 북한에 대한 입장이 정파적으로 달랐던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둘째, 한국인은 북한을 1순위 안보 위협으로 봤다. 지정학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인은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는 주변국 위협에 취약한 한국의 대외 환경 탓으로 해석된다. 한국인이 신흥안보 요인(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감염병 등)에 비해 전통 안보 요인을 큰 위협으로 꼽은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한국인이 전통 안보를 큰 위협으로 본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이 군사, 안보 위협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위협

으로 본 시각에는 늘어난 북한 도발, 고도화된 북한 핵기술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흥안보 위협이 늘었음에도 전통 안보에 의한 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결과다.

셋째, 한국인의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2022년 11월 최초로 70%를 넘었다. 이는 2010년 이래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북한이 기록적으로 빈번한 도발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 불안 인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한국인의 안보상황 인식은 북한 도발이 일어난 때에만 일시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 한국인의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은 전고점을 경신했다. 그만큼 한국인의 국가안보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실제 2022년에는 북한 도발이 잦아졌고, 언론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① 그간 북한 도발로 악화된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몇 달 만에 과거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 ②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이 2022년 11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높았다. 절반 이상은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 신뢰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흔들렸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수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봤다.

핵무기 사용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절반 이상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며 핵무기를 사용할지를 물었을 때에는 긍정 의견이 감소했다. 이 결과는 상황에 따라 한국인의 미국 확장억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한국인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에 모두 찬성했다. 표면적으로 자체 핵개발,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의 순으로 지지가 높았다. 북한의 늘어난 도발, 고도화된 핵기술, 중국의 부상으로 높아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핵무장과 별개로 조사한 사드 추가 배치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과거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한 사드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핵무장에 대한 제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 지지 강도로 보면, 한국인은 전술핵 배치보다 자체 핵개발을 선호했다. 이 경우에 북핵 위협 대응 지지 강도는 자체 핵개발,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사드 추가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지지는 사드 추가 배치 지지 비율보다도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미국 확장억제를 신뢰하지만 별개로 자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제재요인까지 고려했을 때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런 핵무장 여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을 피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도 북한은 무력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북한에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 긴장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체로 부정적인 한국인의 대북 정서가 바뀌기 어렵고,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2023년 남북 대립은 심화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수록 한국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원하고, 동시에 다른 대응책도 지지할 것이다. 근래 늘어난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악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핵무장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 간 괴리는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다. 핵무장 여론을 조사한 본원 조사 결과와 달리, 통일연구원의 '2022년 북핵도전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독자 핵무장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확장억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했으나 총 67명 가운데 45명, 즉 67.2%가 독자 핵무장에 부정적이었다.[31]

미국의 보복공격 위험 감수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가능성을 조건으로 했을 때, 미국의 확장억제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지지가 감소한 점은 주목할 결과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달라질 수 있고, 핵무장 비용이 알려질수록 자체 핵개발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이와 같은 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장억제 강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등의 핵무장론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31. 출처: 통일연구원. 2022 북핵도전 전문가 인식조사(조사기간: 2022년 5월 10~25일). 본문에 인용한 조사는 "미국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강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확장억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그렇다'(32.8%, 22명), '아니다'(67.2%, 45명)로 답한 결과였다.

조사방법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조사개요

202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가중 전: 1,158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CAWI)
조사기간: 2020년 10월 21일~25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가중 전: 1,01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CATI) 조사
조사기간: 2022년 11월 10일~12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 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전화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5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 2일~30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6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6년 9월 9일~10월 14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7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19일~11월 14일
실사기관: 칸타퍼블릭

2018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년 11월 8일~12월 5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19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2월 4일~24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2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3%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0년 12월 3일~17일
실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부록 1: 아산정책연구원 북핵 위협 인식 조사[32]

문1. 선생님께서는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
김정은 등 독재자	34.2
핵무기(핵실험 등)	32.3
한반도 통일	12.5
사회주의 정치	8.7
남북 경제협력(개성공단 등)	6.0
계획경제	1.0
기타/모름·무응답	5.3

문2.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좋다	2.3
좋은 편이다	19.7
보통이다	5.7
나쁜 편이다	47.9
매우 나쁘다	22.8
모름·무응답	1.6

32. 2022년 11월 실시한 북핵 위협 인식 조사에서 본문에 인용한 조사결과만 부록에 제시했다.

문3.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응답	1순위	2순위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	43.0	23.8
신냉전구도	16.9	15.5
중국의 부상	12.4	22.0
기후변화	8.9	11.3
코로나19 등 감염병	5.4	8.1
공급망 불안	4.7	9.6
테러리즘 확산	1.9	3.9
기타/모름·무응답	6.7	5.8

문4. 선생님께서는 핵무기 등 북핵 문제에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관심이 있다	30.0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50.9
별로 관심이 없다	15.6
전혀 관심이 없다	3.1
모름·무응답	0.3

문5.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8.6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34.8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7
모름·무응답	0.5

문6.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그렇다	14.3
어느 정도 그렇다	38.7
별로 그렇지 않다	25.1
전혀 그렇지 않다	18.2
모름·무응답	3.8

문7.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그렇다	11.9
어느 정도 그렇다	31.2
별로 그렇지 않다	28.1
전혀 그렇지 않다	26.1
모름·무응답	2.7

문8. 선생님께서는 실제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응답	비율 (%)
북한에 실질적 군사타격을 가해야 한다	37.5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0.9
군사적으로 대응하되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	30.1
모름·무응답	1.5

문9.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군사대비 체제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그렇다	11.0
어느 정도 그렇다	38.8
별로 그렇지 않다	29.3
전혀 그렇지 않다	17.2
모름·무응답	3.8

문10.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8.4
찬성하는 편이다	35.9
반대하는 편이다	18.9
매우 반대한다	14.5
모름·무응답	2.3

문11. 독자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15.3
찬성하는 편이다	39.4
반대하는 편이다	26.3
매우 반대한다	16.0
모름·무응답	3.0

문12.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1.1
찬성하는 편이다	40.0
반대하는 편이다	20.2
매우 반대한다	16.0
모름·무응답	2.8

문13. 선생님께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6.8
찬성하는 편이다	31.8
반대하는 편이다	21.2
매우 반대한다	17.1
모름·무응답	3.0

문14.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확실한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이 방침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그렇다	18.6
어느 정도 그렇다	30.7
별로 그렇지 않다	16.1
전혀 그렇지 않다	31.8
모름·무응답	2.8

문15. ‘전혀 가능성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가능성이 높다’를 10으로 했을 때,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가능성이 낮다	47.7
보통이다	27.7
가능성이 높다	22.5
모름·무응답	2.1

부록 2: 자체 핵개발 국내 여론조사[33]

[표 1] 자체 핵개발에 대한 여론

조사시기		찬성	반대	조사업체
2010년	8~9월	55.6	44.5	미디어리서치
2011년	8~10월	62.6	37.4	엠브레인
2012년	9~11월	66.0	34.0	미디어리서치
2013년	2월	64	28	한국갤럽
	9월	62.9	37.1	미디어리서치
2014년	9월	61.3	38.7	미디어리서치
2015년	9월	62.3	37.7	미디어리서치
2016년	1월	54	38	한국갤럽
	2월	67.7	30.5	중앙일보
	9월	65.1	29.3	리서치앤리서치
		58	34	한국갤럽
	9~10월	59.9	40.1	미디어리서치
2017년	9월	60	35	한국갤럽
	10~11월	64.1	35.9	칸타 퍼블릭
2018년	11~12월	54.8	45.3	케이스탯리서치
2019년	12월	67.1	32.9	케이스탯리서치
2020년	12월	69.3	30.7	엠브레인 퍼블릭
2022년	3월	70.2	28.2	리서치앤리서치
	11월	64.3	33.3	리서치앤리서치
	12월	66.8	31.8	한국리서치

[표 1]은 국내에서 실시한 자체 핵개발 여론조사 결과다. 음영으로 표시한 행은 본원 조사를 뜻하고, 다른 행은 타 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업체에 의뢰한 조사다. 문항, 조사방법은 소폭 달랐으나 시기별 국내 핵무장 여론을 파악하는 데 무리는 없다.

33. [표 1]에 인용한 조사의 문항 워딩은 다음과 같다. 2013년 2월, 2016년 1월, 9월, 2017년 9월(한국갤럽): "귀하(께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16년 2월(중앙일보 조사연구팀): "OO님께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16년 9월(리서치앤리서치): "일각에서는 북한 핵 위협의 실질적 억제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SAN
REPORT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발행일 2023년 4월
지은이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64-2 95340 (PDF)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산정책연구원

95340
9 791155 702642 (PDF)
ISBN 979-11-5570-264-2